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8. 3.(수) 11:00 < 8.4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8. 3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	책임자	팀 장 박홍일 (044-203-4230)
		담당자	사무관 안용열 (044-203-4231)

사업재편 승인부터 정책금융 지원까지 빠른 서비스 열린다

- 산업부-금융위, <제1차 사업재편-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> 개최 -

※ 정부는 **정상기업**의 **선제적·자발적 사업재편**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**경제·사회적 비용을 예방**하고자, '16년부터 **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**에 근거한 **사업재편제도**를 운용해 오고 있음

□ **주요국 금리인상**과 **우크라이나 사태**, **코로나 재확산** 등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**기업의 사업재편**은 꾸준히 증가*하고 있으며,

* 사업재편 승인기업수(연간) : ('19) 9社 → ('20) 57社 → ('21) 108社 → ('22.上) 40社

○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**투·융자, 보증·보험, 자산유동화** 등 다양한 사업재편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와 **금융위원회**는 **<제1차 사업재편-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>**를 개최하여 그동안 검토해 온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**금융지원 강화 방안**을 발표하였습니다.

◇ 제1차 사업재편-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

○ **(목적)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** 출범*을 계기로 **사업재편-정책금융 연계 성과** 점검

*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(소공동)·산업기술진흥원(역삼동)·생산성본부(적선동)가 분산되어 있던 사무공간 통합 및 정책금융기관(산은·기은·신보)가 센터에 직원 파견 → 종합센터로 출범

○ **(일시·장소)** '22.8.3(수) 15:00~16:00, 대한상공회의소(소공동)

○ **(참석)** 산업부 1차관, 금융위 부위원장, 대한상의 부회장, 생산성본부 회장, 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, 산업연구원 원장, 신용정보원 원장, 세븐브릿지PE 대표, 산업은행·기업은행·신용보증기금·KAMCO 담당임원 등

○ **(구성) (행 사)**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현판식
(회 의) 사업재편-정책금융 연계 업무보고 및 자유토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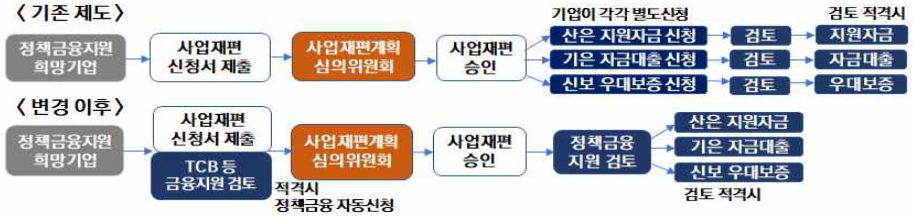
[1] (제도) 사업재편 심의 및 정책금융 여신 프로세스 연계

□ 기존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도 각 **정책금융기관에** 일일이 찾아가서 **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**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○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절차 內에서 **기술신용평가(TCB)***를 진행하며, 평가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**정책금융기관**의 **금융지원 제도**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* 기술신용평가(TCB) : 기술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·등급·점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은행·투자기관·조달청 등의 기술금융과 정책지원에 활용

○ 이는 다음달 말 개최할 예정인 **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**부터 **시범 적용**되며, **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**될 예정입니다.



[2] (조직) 사업재편 유관기관+정책금융기관 ➡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발족

□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**업종별 협·단체의 추천**이나 **개별기업의 개별적 신청**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.

○ 앞으로는 **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**가,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잘 아는 **금융기관**이 발굴한 **사업재편 수요**를, 사업재편제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○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센터 내에서 **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술신용평가(TCB)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** 지원해주고, **정책금융제도를 안내**해주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.

◇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

○ **(개요)** 사업재편 전담기관간 분산된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정책금융기관(산은·기은·신보) 등이 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연계 원활화 및 창구일원화로 기업 편의 증진 도모

○ **(구성)** 대한상의, 산업기술진흥원, 생산성본부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자동차부품재단 등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



3 (프로그램) 사업재편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추진

□ 이외에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향후 **사업재편 승인기업**을 **대상**으로 한 **다양한 금융 프로그램**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○ 양 부처는 **750억원 규모**의 **사업재편 혁신펀드***를 **공동 조성**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**펀드결성** 및 **첫 투자기업 선정**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* KIAT(70억원), 한국성장금융(180억원) 등이 출자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투자

○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**신용보증기금 P-CBO* 보증**을 지원하여 **적기에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지원**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.

* P-CBO(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): 신규 발행 회사채를 풀링(pooling)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하여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(CBO)

○ 이외에도 **캠코**의 **매각 후 리스(S&LB) 사업***을 **확대**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**유동성 확보**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* '22년도 지원규모를 1,000억원까지 확대, '21년부터 현재까지 5개사에 853억원의 유동성 공급

기업명		주요제품	신청자산	지원방식	지원금액(억원)
'21년	한국기능공사	안전벨트 등	부동산・설비	처분신탁	238
	이래AMS	제동장치 등	부동산	신탁 후 사용	174
	우수AMS	엔진・변속기 등	설비	매입 후 사용	10
'22년	삼일씨티에스(주)	자동제어시스템 등	부동산	신탁 후 사용	30
	㈜디알액시온	엔진부품 등	부동산・설비	매입 후 사용	401

□ **장영진 산업부 차관**은 2016년도에 시작된 **사업재편제도**가 **지난해 108개社**를 승인・지원하는 등 경영활동변화에 대응하는 **효과적인 지원제도**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,

○ 이번에 **정책금융 지원**이 더해지고, **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**가 출범함에 따라 사업재편제도가 중소・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・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

□ 앞으로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**사업재편 정책금융을 확대**해 나가기 위해 **적극적으로 협력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	책임자	팀 장 박홍일 (044-203-4230)
		담당자	사무관 안용열 (044-203-4231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 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 김준수 (02-2100-286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『기업활력법』 사업재편제도

1. 사업재편제도 개요

○ **(목적) 정상기업**의 **선제적 체질개선** 및 **혁신활동**을 촉진함으로써,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**막대한 사회적 비용**을 최소화

<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>

구 분	사업재편	구조조정	
특 징	**선제적·자율적** 혁신촉진	**사후적·타율적** 구조조정	
적용법률	기업활력법	기업구조조정촉진법	채무자회생법
대상기업	**정상기업**(개인사업자 제외)	**부실징후기업**	**부실기업**

○ **(승인유형) ❶과잉공급 완화, ❷신산업진출, ❸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**

❶ (과잉공급완화)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(수요 확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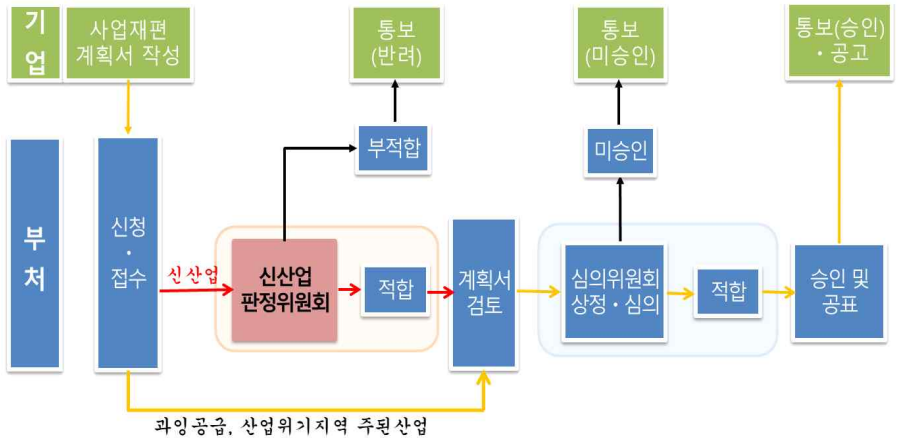
❷ (신산업진출) ①「조특법」 신성장·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

❸ (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)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
→ (주된산업) 위기지역 : **(조선)** 군산, 울산 동구, 창원 진해구, 경남 통영고성거제, 전남 영암·목포해남, **(자동차)** 군산

○ **(요건) 사업재편(구조변경·사업혁신) 계획 + 달성목표(생산성·매출액 향상 등)**

* **(구조변경) 자산**(설비, 지식재산 등)·영업·주식 **양수도**, 합병, 분할, 회사설립 등
* **(사업혁신) 신제품 개발** 또는 제품 생산·판매나 원재료 사용·제공 방식의 효율화

2. 사업재편 승인절차



3.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

분 야	주요 지원 내용
R&D	■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&D 지원(299억원, '21년~) ■ 정부 R&D사업 우대가점, 중소·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(중소3, 중견5)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, 기술료 납부유예 등
금융	■ (우대지원) 산은·기은, 기보·신보 등 융자·보증 시 금리·요율 등 우대 * (산은) 최대 △1.0%p, (기은) 최대 △0.5%p, (기보) △0.2%p, (신보) 보증비율 90%적용 및 보증료율 0.2%p 차감 등
	■ "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"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- 대출·보증 우대,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, 민간자금 유치 혜택
	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(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→ 축소가능)
	■ 자산매각 지원(S&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, '21년 400억 시범사업)
컨설팅	■ 사업재편 이행초기 이행 전략 수립 컨설팅 - 사업재편계획 기반으로 기업 역량, 재무 현황 및 시장 환경 등 대내외 분석을 통한 기업 핵심 니즈 진단 후 사업재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* (지원규모) 기업별 1억원 내외, 중소·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적용
	■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-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활용 애로, 직무전환·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문제 진단 및 해결 * (지원규모) 기업별 2천만원 이내
세제	■ (법인세) -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,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- 이월결손금 100% 공제(대기업도 적용)
	■ (등록면허세) 합병·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% 감면
입지특례	■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→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* 양도차익의 70%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
고용안정	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■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
정부사업 우대	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 (3점) ■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(1점)
상법 절차간소화	■ (소규모분할) 자산규모 10%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* 이사회 결의로 갈음(주주총회 생략)
	■ (주총 소집기간 단축) 7영업일 (상법: 2주)
	■ (채권자 보호절차 단축) 10일 (상법: 1개월)
	■ (주주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) 10일 (상법: 20일) ■ (회사: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) (상장회사) 3개월 (상법: 1개월), (비상장회사) 6개월 (상법: 2개월)
공정거래법 규제유예	■ 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: 3년(공정거래법: 1~2년)
	■ 상호·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: 1년 (공정거래법: 6개월)
	■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: 3년 (공정거래법: 2년)